

국무조정실

우110-760 / 종로구 세종로77-6 / 전화 738-2857 (행) 3892, 3889 / 전송 738-2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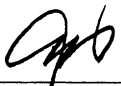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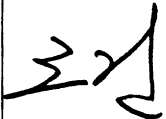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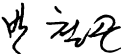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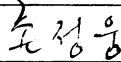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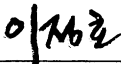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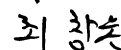
복지노동심의관실 과장 손정웅 사무관 이정호

문서번호 국무사회 65109-1

시행일자 2003. 4. 23 ()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보존기간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	
공개여부	공 개			
조정관				
심의관				
과 장				
기안자				
심사자		심 사 일	03. 4. 23	

협조

제목 사스(SARS) 국내유입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지시
(국무총리 지시 2003-4호)

국정업무와 시·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전국의 자치단체장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국·홍콩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사스(SARS)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홍콩 등 사스로 큰 피해를 입고있는 일부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사스는 귀중한 생명은 물론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 확인된 사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스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사스 위험지역인 중국의 우리 유학생 및 교환학생들이 중국당국의 휴교조치 등으로 ~~조만간~~ ^{한편} 대거 귀국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스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스의 국내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니 자치단체장 여러분께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제반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스발생 지역에서 귀국한 주민의 인적사항 파악 및 추적관리에 전 행정력 집중

- 관련기관간에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인적사항, 검역결과 등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및 협조 강화
 - 중국 등지에서 귀국한 유학생, 교환학생 등에 대한 입국시 검역강화 및 추적관리 철저
- ※ 국립보건원에서 위험지역 여행자 명단을 각 지역보건소에 통보, 특별관리중
- 해당 주민에 대한 정밀검진 지원 및 수시 건강상태 확인(입국후 최소한 10일)

2. 사스 의심환자에 대한 초동 대응조치 철저

- 의심환자 발생시 해당자는 신속한 조치로 확산 방지 및 정밀검진
 - 가족 등은 가택에서 이동자제·검진조치
- 의심환자 검진결과 사스로 판명되면 최근 접촉자까지 역학조사 실시

3. 대국민 사스예방 홍보·교육활동 강화

- 4월 정례반상회(4.25)시 『사스예방 및 대처 요령』을 중점의제로 채택, 대국민 홍보 실시
 - 환자 발생시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관리 등 대처요령 및 신고체계 주지
- 위험지역(중국,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에 대한 여행자제, 위험지역 입국인들과의 국내회의·행사 등 자제 요청·홍보
 - ※ 민간차원의 행사, 회의 등 자제 또는 연기
- 집단생활자(학교, 군, 경찰, 학원 등)에 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교육 강화
- 과도한 불안심리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강화
 - 사스(SARS)의 특징, 조치요령 등 전파(전단 제작·배포)
 -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TV자막방송, 지역케이블TV, 신문, 거리전광판 등 지역의 각종 매체 최대활용

4. 사스 환자 발생시 격리수용 및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대응태세 철저 확립

- 각 시·도별로 "사스 방역 시·도대책본부(본부장 : 시·도^{행정부}지사)"를 설치·운영하는 등 관련기관별 방역대책본부 조속 구성

- 각 시·도 및 일선 보건소의 비상근무 철저지시 재강조
- 자치단체, 보건소, 병·의원, 경찰, 군 등 유관기관·단체 합동으로 긴급 기동 대응반 편성·운영
 - 환자 발생시 즉각 출동 사전 지정된 시설에 격리 수용
 -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긴급기동대응반 활동지원체제 유지
- 사스환자 관리를 위한 장비·물품 확보 및 격리수용시설 지정
- 사스환자 발생 신고체제 확립 및 감염지역 출입통제 철저

5. 관계기관 협조 강화

- 각급 행정기관, 경찰, 군, 의료기관 등은 다른 기관단체에서 사스 관련 협조요청시 최우선 협조 조치

국 무 총 리

수신처 : 나 01~18